

“설 명절 코앞인데”... ‘자금 사정 곤란’ 中企 11%p 늘었다

중기중앙회, 800개 기업 조사
자금 악화 원인 ‘고금리’ 1순위
상여금 평균 40만원으로 감소

중소기업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돈
가뭇에 시달리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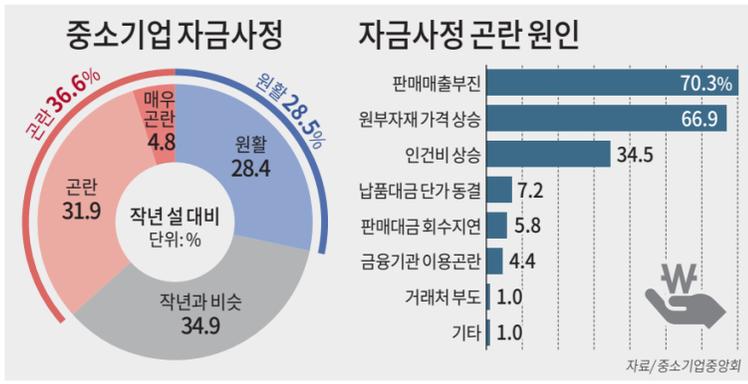
자금사정이 곤란하다는 답변은 1년
전보다 11% 포인트(p) 가깝게 늘었고,
금융기관 문턱이 높아졌다는 기업은 많
아졌다.

국내의 경기침체로 매출은 여의치 않
고 고금리 행진이 이어지며 이자비용은
한없이 불어나는 등 경영 여건이 녹록
치 않은 실정이다.

이때문에 설 상여금 수준도 지난해보
다 줄어들어 임직원들 보너스 봉투는
얇아질 전망이다.

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
난해 12월27일부터 올해 1월5일까지
8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해 11
일 발표한 ‘2023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
요조사’ 결과에서 나왔다.

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
설 자금사정이 ‘곤란’(곤란+매우 곤
란)하다는 응답은 36.6%로 나타났다.
이는 전년도 조사 당시의 ‘곤란’ 답변



(26%)보다 1년새 무려 10.6%p 높아진
수치다.

올해 자금사정이 ‘원활’(원활+매우
원활)하다는 응답은 28.5%였다. 이 역
시 작년 이맘때 답변(20.4%)보다 다소
높아졌다.

크게 다르지 않아 ‘보통’이라고 한 답
변이 지난해 53.6%에서 올해 34.9%로
줄어든 것을 보면 올해엔 자금사정이
전반적으로 악화된 가운데 양극화가 더
욱 심화된 모습이다.

자금사정이 나빠진 원인(복수응답)
으로는 판매·매출 부진(70.3%)과 ‘원
·부자재 가격 상승’(66.9%) 등을 가장
많이 꼽았다.

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을 묻
는 질문에는 25.6%가 ‘곤란’(매우 곤란
포함)하다고 답했다. 이 역시 전년의
16.3%보다 늘었다. 아울러 ‘원활’(매우
원활 포함)하다는 응답도 38.8%로 1년
전의 23.8%보다 증가했다. 중소기업들
의 은행 이용 역시 신용도 등에 따라 양
극화가 심한 것이다.

금융권 자금조달시 가장 큰 애로사항
(복수응답)으로는 ‘높은 대출 금리’
(66.9%)를 꼽았다. 이는 지난해
(33.5%)보다 두배가 많았다.

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
로 중소기업 가중평균금리는 5.49%로,
10개월 전인 2021년 12월의 3.37%보다

2.12%p나 높아졌다.

중소기업 대출잔액도 코로나 팬데믹
직전인 2019년 12월 당시의 936조원에
서 지난해 10월엔 1392조원으로 이 기
간 무려 456억원 늘었다.

코로나19를 겪으면서 경기 부양을 위
해 풀 유동성과 이후 고물가를 잡기위
해 단행한 연속적이고 급격한 금리 인
상으로 중소기업들의 원금·이자 상환
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모습
이다.

중소기업들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울
해 설 상여금도 1인당 평균 40만원으로
전년도의 44만7000원보다 적게 지급하
겠다고 답했다. 44.3%는 ‘지급예정’,
‘아직 미정’은 17%였다.

설에 필요한 자금으로는 기업당 평균
2억5550만원이었고 이 가운데 2580만
원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.

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
은 “올해 중소기업은 금융이용 관련 지
원 요청사항으로 ‘금리인하’를 가장 많
이 꼽았다”면서 “중소기업 설 자금사정
에서 코로나로 인한 영향은 다소 감소
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이
고,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
비용 부담이 가장 큰 자금조달 애로요

인이 되고 있는 만큼 자금조달비용 부
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정책 마련이
필요하다”고 밝혔다.

이런 가운데 중기부와 금융위원회는
이날 중소기업들의 복합위기 대응을 위
해 총 8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방안을
발표했다.

여기에는 저리 고정금리 상품 공급
(6조원) 등 고금리 대응 뿐만 아니라 미
래혁신산업·ESG 관련 설비투자 지원
등(16조5000억원) 신산업 육성, 소규모
취약기업에 대한 재기지원 강화(4조
8000억원) 등 취약기업 재기지원 등의
내용이 두루 포함돼 있다.

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내놓은
관련 논평에서 “복합위기 대응을 위한
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’에 대해 환영
한다”면서 “특히, 납품단가연동제의 자
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참여 기업에 금
리 인하와 특례대출 공급 통해 중기부
를 비롯한 정부의 제도 활성화 의지를
보여줘 중소기업계의 기대가 더욱 크
다”고 밝혔다.

아울러 ▲보증료율 인하 ▲고정금리
안심 전환 ▲저금리 대출 공급은 중소
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
다. /김승호 기자 bada@metroseoul.co.kr

세계 성장률 1.7% 전망... 경기침체 가능성 ↑

세계은행, 2023 세계경제전망 보고서
2009·2020 제외 30년간 최저 성장률

세계은행(WB)이 올해 세계 경제성
장률 전망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.
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식
량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, 높은
금리가 선진국의 성장을 둔화시킬 수
있다는 판단에서다.

세계은행은 지난 10일(현지시간) 발
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
성장률이 1.7%에 그칠것으로 전망했
다. 이는 지난해 6월 전망한 3.0%보다
1.3%포인트(p) 낮아진 것으로, 경기 침
체를 겪은 2009년과 2020년을 제외하면
지난 30년간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.

세계은행은 지난 20년을 분석한 결과
이렇게 낮은 성장 둔화는 세계 경기침
체로 이어졌다고 경고했다.

세계은행은 “러시아의 우크라이나



침공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악영
향이 지속되고 있다”며 “선진국이 고물
가를 잡기 위해 금리인상을 지속하면서
빈곤국의 자본유출 등 금융환경이 악화
하고 있다”고 설명했다.

세계은행은 선진국 경제의 95%, 신
흥 경제와 개발도상국의 거의 70%에

대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보다 낮췄다.
선진국 경제 성장률은 작년 2.5%에서
올해 0.5%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.

미국의 성장률은 기존 전망보다 1.
9%p 낮은 0.5%로 하향했다. 유로존의
경우에도 1.9%p 하향하면서 성장이 정
체될 것으로 전망했다.

작년 2.7%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은
올해 4.3% 성장률로 회복할 것으로 예
상했지만 코로나19 확산과 외부 수요
약화를 반영해 작년 6월보다는 기대치
를 0.9%p 낮췄다.

중국을 제외한 신흥 경제와 개도국의
성장률은 작년 3.8%에서 올해 2.7%로
둔화할 것으로 봤다. 외부 수요가 훨씬
줄어든 상황에서 고물가와 통화 가치
절하, 자금 조달 환경 악화, 기타 각국
내부의 악조건이 상황을 악화되고 있기
때문이다.

/나누리 기자 yul115@

“美 금리 5% 이상”... 한은도 인상 불가피

(연준 간부들 전망)

▶▶ 1면 ‘파월, 추가 긴축 의지’서 계속

기대인플레이션율 3.8% ‘높은 수준’

안 하치우스 골드만삭스 수석이코노
미스트는 “FOMC 의사록에서 금리인
상 속도가 경제지표에 따라 달라질 수
있고,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여긴 의
원이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을 비춰 봤을
때, 금리인상 속도조절을 위해 0.25%p
인상 가능성이 높다”고 했다. 시카고상
품거래소(CME) 페드워치는 2월에 이
어 3월까지 0.25%p 인상할 것이라 전
망이 지배적이다.

연준의 간부들도 미국의 기준금리가
5%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. 메리
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“연
준이 금리를 5% 이상으로 끌어 올릴
것”이라고 말했고 라파엘 보스틱 애플
랜타 연은 총재는 “연준이 오랫동안 5%
이상 금리를 유지할 것”이라고 했다.

◆ 환율 급락에 운신폭 커졌지만...

한국은행도 기준금리(연 3.25%) 인
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. 5%대 고물가
가 이어지고, 미국과의 금리격차는 1.
25%p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. 오는 13
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인상하
지 않고, 미국 연준만 0.25%p 금리인상
을 할 경우 미국과의 금리격차는 1.5%
p까지 벌어지게 된다.

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소비자
물가지수는 107.71로 전년 대비 5.1%
올랐다.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9년
0.4%, 2020년 0.5%, 2021년 2.5%로 확
대됐다.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2월 기준
3.8%로 높은 수준이다.

기대인플레이션은 1년간 소비자물가
상승률에 대한 가계, 기업 등 경제주체
들의 전망이다. 기대인플레이션이 오르

면 근로자는 기업에 임금 인상을 요구
하고, 기업은 비용 인상분을 제품 가격
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실제
물가도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. 이른바
‘임금발(發) 물가 상승’으로, 물가가 계
속 오를 것이라 전망이 인플레이션(지
속적인 물가 상승)을 부추기는 것이다

한미 금리차도 1.25%p까지 벌어진
상황이다. 한미 금리격차가 벌어지면
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더
낮은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기 때문
에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
빠져나갈 우려가 있다.

또한 외국인 자금 이탈로 원화 가치가
하락해 원·달러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
무역수지 적자와 수입물가 상승을 피하
기 어렵다.

다만 이 같은 금리차에도 원·달러 환
율이 급락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
크지 않은 상황이다. 이날 원·달러 환율
은 전 거래일 대비 3.2원 내린 1241.5원
에 시작했다.

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물가가 잡히
지 않았고, 원·달러 환율이 완전한 안정
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
문에 이밖에 0.25%p 올릴 것으로 전망
한다.

하지만 올해 경기침체가 본격화할 것
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다음달부터는
금리인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.

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“우
리나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둔화했을
뿐 아직까지 나이 지진 않은 상황이기
때문에 (한미 간 금리차가) 장기적으로
봤을 때 금융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
다”며 “국내금융시장이 어려워 금리인
상이 어려워지면 그 자체로 경제불안을
증폭시킬 수 있다”고 말했다.

/나누리 기자

일자리·민생안정에 상반기 예산 340조 투입

기재부 ‘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’
일자리 사업 15조의 70% 집행

정부가 올 상반기에만 민생 안정과
일자리 주요 사업 등에 340조원을 투입
한다. 고용률 등 직접 일자리 사업은 상
반기에 94만명 이상 채용을 목표로 이
달 중 59만명 가량 조기 채용할 계획이
다. 연간 11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안
정 사업은 1분기에 4조원을 집행할 예
정이다. 오는 16일부터 중소기업·소상
공인 대상 명절 자금 7000억원 지급이

시작된다.

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대
한상공회의소에서 ‘재정집행관계차관
회의’를 열어 민생사업, 일자리, 사회간
접자본(SOC) 등 중점분야의 집행 계획
을 밝혔다.

정부는 올해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
위해 중앙재정의 65%를 상반기에 집중
집행하기로 했다. 우선, 상반기 중 재정
과 공공투자·민자 부문을 통틀어 340조
원을 투입할 계획이다.

중앙·지방·지방교육재정을 합해 재

정에서 총 303조원을 집행한다. 중앙재
정 156조원(65%), 지방재정 131조원
(60.5%), 지방교육재정 16조원
(65%) 등이다.

정부는 민생안정, 일자리 등 주요 사
업을 선별해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.

일자리 사업은 총 14조9000억원의
70%를 상반기에 집행한다. 직접 일자
리 사업은 상반기 94만명 이상 채용을
목표로 이달 중 59만명 이상 조기 채용
한다.

연간 11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
사업은 1분기 안에 4조원(35.6%) 집행
할 예정이다.

/세종=원승일 기자 won@